

「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.」 토론 결과

□ 토론참가자 현황

○ 총 참가인원 : **447명**(일반시민 397명, 토론진행자 50명)

성 별			나 이			거 주 지		
계	397	100.0%	계	397	100.0%	계	397	100.0%
여성	198	49.9%	10대	14	3.5%	중구	21	5.3%
남성	199	50.1%	20대	33	8.3%	동구	25	6.3%
			30대	20	5.0%	미추홀구	54	13.6%
			40대	77	19.4%	연수구	35	8.8%
			50대	100	25.2%	남동구	99	24.9%
			60대	96	24.2%	부평구	54	13.6%
			70대	46	11.6%	계양구	53	13.4%
			80대 이상	11	2.8%	서구	42	10.6%
						강화군	4	1.0%
						옹진군	4	1.0%
						기타	6	1.5%

▶ 참가자 분석결과

- 남녀성비 분석 : 여성 198명(49.9%), 남성 199명(50.1%)로 **거의 동일함**
- 연령별 분석 : 10대 ~ 40대 : 36.2%, 50대~60대 : 49.4%, 70대 이상 : 14.4%로 **50대~ 60대가 49.4%로 가장 많이 참가함**
- 지역별 분석 : 남동구 : 99명(24.9%), 미추홀구 : 54명(13.6%) 부평구 : 54명(13.6%) **남동구에서 24.9%로 가장 많이 참가함**

□ 토론결과 분석

1 제1토론 결과

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은	사전 전화조사		토론결과	
시민참여시대 인천선언	80	26.00%	76	20.00%
고르게 발전하는 인천	60	19.50%	101	26.60%
지역경제 경쟁력 혁신	59	19.20%	46	12.10%
복지도시 인천	52	16.90%	74	19.50%
수준높은 인천교육	25	8.10%	58	15.30%
해양통일도시 인천	14	4.50%	4	1.10%
환경친화도시 인천	10	3.20%	20	5.30%
기타	8	2.60%	1	0.30%
계	308	100%	380	100%5

▶ 토론 분석결과

- 토론결과, “인천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”으로 사전 설문조사에는 “시민참여시대 인천선언”이 26%에서 토론 후에는 20%로 낮아 졌고, “고르게 발전하는 인천”

은 19.50%에서 26.60%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지는 등 토론자 상호간의 심층 숙의형 토론 후에는

- 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으로 “고르게 발전하는 인천”이라고 시민들은 바라보았다.

2 제2토론 결과

미래세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	사전 전화조사		입론		토론결과	
성장동력 혁신과 일자리 문제해소	57	19%	105	31%	136	37%
미래인재 육성 교육	38	13%	62	19%	82	23%
행정혁신	51	17%	35	10%	24	7%
지역균형발전	55	19%	50	15%	55	15%
사회안전망 현장성 강화	39	13%	28	8%	17	5%
제2의 해양도시 재도약	32	11%	25	7%	18	5%
보편적 아이돌봄	14	5%	17	5%	13	4%
시민 문화공간	11	4%	12	5%	19	5%
기타	11	4%	0	0%		
합계	297	100%	334	100%	364	100%

▶ 토론 분석결과

- 토론결과 “미래세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”으로 입론시에는 “성장동력 혁신과 일자리 문제해소”가 31%에서 토론 후 37%로, “미래인재 육성교육”은 19%에서 23%로 증가하였고,
- “지역균형발전”은 입론시 15%에서 토론후 15%로, “행정혁신”은 10%로 에서 7%로 똑같거나 낮아지는 등 시민간의 상호토론 후에는,
- “미래세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”으로 “성장동력 혁신과 일자리 문제해소”와 “미래인재 육성교육”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시민시장들은 제안하였다.

□ 토론결과 향후 운영계획

▶ 토론 참가자 피드백

- 토론참가자 감사문자 발송함 : 10. 9.
- 참가시민 사진 파일 E-메일 송부 : 10월 말

▶ 시민제안 사항 피드백 : 11월 말 까지 참가 시민시장에게 처리사항 통보

정책추진 대상 여부 판단	정책추진 대상 관련부서 통보	정책실행방안 및 향후 처리계획	정책추진 대상 사업 관리	정책추진 사항 참가시민 통보
시민단체와 공동 선정	시민정책담당관실 → 관련부서	업무담당 부서 작성 제출	시민정책 담당관실	시민정책담당관실 → 토론참가자